

[첨부] 한국전쟁 관련 美 의회 주요 역할

① 1950년 한국전쟁 지원을 위한 국방물자생산법 통과

- 1950년 81대 美 의회는 <국방물자생산법(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)> 을 제정해 한국전쟁 지원을 가능하게 함(1950. 9. 8 발표)
 - 국가안보 등을 목적으로 대통령에게 시장 및 산업을 통제하는 권한 부여
- 한국전쟁에서 활용할 국방 인프라와 관료 체계를 만들 수 있었던 근거 조항으로서, 당시 트루먼 대통령은 국방동원부(Office of Defense Mobilization)을 설립
 - 트루먼 대통령은 또한 철강 산업과 광업 등 중공업 생산을 엄격하게 통제했으며 전국적으로 전시 제조업 생산을 확산하도록 명령

美 국방물자생산법 주요 내용

- 1) 기업에 어떤 손실이 생길지라도,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국방의 이유로 필요한 물품에 대한 계약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.
- 2) 대통령이 국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물품, 서비스와 시설을 적절히 안배하는 규제, 명령, 정부기관을 새로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.
- 3) 부족하거나 중요한 물품들이 국방의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대통령이 민간경제를 통제하는 권한을 부여한다.
- 4) 대통령이 재산을 징발하고, 물자에 대한 확대생산을 명령하고, 임금과 물가를 결정하고, 노사분쟁을 즉각 조정하고, 소비자 및 부동산 신용을 통제하고, 원자재를 할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. (70년 이후로 美국방부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항목)

- 트럼프 대통령, 코로나19 국가적 대응 위해 20년 3월 국방물자생산법 활용 발표
 - 코로나19 물자 공급을 늘리는 데 필요한 마스크나 인공호흡기, 기타 필요한 물품의 생산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

② 1945년~1999년 한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원조 승인

- 의회는 미국의 대외원조의 승인을 철저히 통제 하고 있으며 모든 기관에게 국제개발협력 예산을 제공해주는 역할 수행
 - 한국 경제 부흥을 도왔던 미국의 경제 원조 또한 의회의 승인으로 가능
 - 일본 혹은 대만을 원조해주어야 한다는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한국 원조 의회 승인
- 미국의 원조 금액은 1945년부터 1999년까지 총 55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한국이 공여 받은 전체 원조의 43%
 - 1953년 국민소득에서 경제 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10%에 가까웠으며 전후 1960년까지 4~5%의 성장을 이룬 것 또한 대부분 원조의 힘

③ 한국전쟁전우회 연방정부 승인

- 08년 美 의회가 미국 내 '한국전쟁전우회(The War Veterans Association)'에 '연방 정부 승인(Federal Charter)'을 부여하는 법안을 채택
 - 04년 발의, 07년 9월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08년 6월 17일 하원 본회의에서 구두표결로 가결
 - 연방정부 승인을 받으면, 연방정부 보훈처(Department of Veteran Affairs)에 대표를 보내고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으며 美 의회의 관련 위원회 활동에도 참석할 수 있게 됨으로써, 한국전쟁 참전 군인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
- 美 의회의 한국전 참전 군인에 대한 감사의 표시
 -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대표는 당시 법안 채택을 축하하며 이번 법안은 미국의 한국전 참전 군인들에게 정부의 끊임없는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성명 발표
 - 법안을 발의한 벤 카딘 상원의원은 한국전은 오랫동안 '잊혀진 전쟁'으로 묘사됐다며 법안을 통해 한국전 참전 군인들이 잊혀지지 않았고, 또 우리가 조국을 위한 그들의 희생에 감사한다는 것을 알리게 됐다고 발언